



2024년 / 4월 1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4월 2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회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운영위원인 물빛학원 황지호 원장이 문예진흥기금 소설 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전북 작가회의 이사(소설분과위원장)로 선임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가는 치열한 창작의 길을 깊은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연구원 평의원인 흐름출판사 한명수 대표가 카톨릭 전주교구 순교현양원 홍보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정신과 역동적인 공동체 생활을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유형무형의 신앙유산 개발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현양원 활동에 큰 힘 더해주시길 한명수 회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 연구원 편용우, 한승훈, 문경득 회원이 함께 <왕의 수명을 줄여라>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추안급국안』을 바탕으로 글쓰이의 상상력과 통찰을 더해 재구성한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부탁드립니다.

### 잠들지 않는 남도...1948. 4. 3

해마다 4월이 되면 저 남쪽 끝 섬에서는 마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50여 년 간 소리 없는 통곡으로 산자들은 한을 삼켜야했고 죽은 자들은 세월의 퇴적에도 유골마저 수습되지 못한 채 지상과 지하를 넘나들어야했다.

광복 직후의 당시 제주 사회는 6만여 명의 귀환 인구, 실직 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의 창궐, 극심한 흉년 등으로 겹친 악재와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 경찰의 군정 경찰로의 변신, 군정 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의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의 오인으로 총격이 발포돼 민간인 여섯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절 발포사건은 가뜩이나 어지러운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 활동을 전개했고, 제주 사회에는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 총파업이 이어졌다. 미군정은 이 총파업이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지만, 사후 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을 모두 외지인으로 교체했고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 등을 대거 제주로 파견해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벌였다. 검속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그러는 동안 서북청년회는 온갖 테러와 횡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했고,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 급기야는 일선 지서에서 세 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 제주 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 상황으로 변해 갔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두 시. 총성과 함께 한라산 중허리의 오름마다 봉화가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12개의 경찰지서와 서청 등 우익 단체 요인들의 집을 습격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 중지, 단독 선거 및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중)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체를 광풍에 휩싸이게 만든 날로부터 76년이 지난 제주에도 봄이 왔다.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 1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 2조 정의를 통해,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사건을 정의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한 사건의 주체는 관리하고 개입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2006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추념식에 참석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58년만에 국가차원의 대량학살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020년, 2021년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아직 추념식에 참가하지 않았다.